

과정명	
15차시	고령자의 일상생활 위험 예방

## 1. 위험요인 분석 및 안전점검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발생한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특성상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인지기능과 보행기능의 제한, 위험에 관련된 지식의 부족 등에 의해 안전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의 발생은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서비스 질 저하와 지역사회의 신뢰관계의 악영향,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한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부각 되는 것이다. 안전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정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안전사고의 대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안전사고의 빈도를 낮추는 것, 그리고 비록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사고의 규모를 작게 하는 것이다. 안전사고의 빈도가 높고 안전사고의 규모가 크다면 최우선적으로 위험 관리의 분야의 대응이 필요하다. 반대로 빈도도 적고 안전사고의 규모도 작다면 이는 정기적인 안전관리교육과 위험요소의 제거를 통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안전사고는 작은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의 반복이며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간과할 때 한 건의 크고 중대한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국가나 지역사회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을 검토하여 보면 갑자기 대형사고가 발생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작고 빈도가 잦은 사고들이 반복되던 것을 간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안전사고에 있어서 사고들의 발생 빈도를 데이터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산업재해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민간보험의 접수된 내역에 따라서 사고의 발생 장소, 시간,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용이하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산업재해외의 대상자들에게 발생한 사고의 처리는 합의나 선의에 의한 보상처리에 의해 마무리되므로 데이터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 근래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발생된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아닌 대상자의 요양사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양사고를 데이터화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그러나 노인요양원만의 데이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의 사고 유형을 파악해 낼 수 있는 정보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보험에 의한 데이터는 전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재해와 상해에 대한 데이터이지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통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데이터는 각 사회복지시설마다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 ① 데이터 분석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안전사고에 관련된 데이터는 사고 발생의 장소, 시간, 원인을 분석한다. 사고 발생의 장소는 건축도면에 의한 평면도를 기준으로 한 각 거실, 화장실, 프로그램실, 식당, 복도, 계단, 기계실, 현관, 엘리베이터 등이며 이를 각층으로 또 세분화한다. 시간은 사회복지시설의 주 이용 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거주시설은 24시간

을, 이용시설은 이용 시간의 개방에서부터 모든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때에 따라서는 대상자가 원가정을 나서면서부터 원가정에 들어가실 때까지를 범주화한다. 원인은 사고의 가해 또는 원인에 따라 대상자, 직원, 외부인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시설, 대상자로도 구분할 수 있다.

## 1. 사건보고서

내용 데이터는 보고서가 선행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사고 발생에 대한 확인서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된 상황을 서식에 의해 기술하고 관련된 처리 상황과 향후의 방안을 모색한다. 안전사고의 경중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고보고서는 부서회의나 최고 회의의 논의에 부쳐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고 보고서들이 취합되어 데이터화가 이루어진다. 보통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빈도가 잦고 안전사고의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해서는 일지를 통해서나 구두에 의해 보고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작은 안전사고들이 모여 한 건의 대형사고로 확대되는 것이므로 아무리 사소한 안전사고라고 할지라도 정식 사고보고서에 의해 보고되고 공론화되어야 한다.

## 2. 사고의 정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디까지가 사고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보통 사고라 하면 직접적인 상해나 가해가 있을 경우라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사고의 정의를 확대한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고라고 규정될 수 있다. 우리가 위험 관리를 하는 이유는 신뢰, 서비스 질, 책무성, 경영 상황 등을 위해서이다. 그렇게 본다면 직접적인 상해나 가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대상자를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사고로 규정될 수 있다. 위험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작고 빈도가 잦은 사고인 것이며 그러한 사고들이 대형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대상자들 간의 시비, 대상자가 넘어질 뻔했던 순간, 대상자를 송영하는 순간 시간이 맞지 않았지만 어쨌든 만났던 순간, 물건이 넘어졌지만 아무도 없었던 순간들이 바로 빈도가 잦고 사고의 규모가 작은 사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이나 중증장애인시설 외에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간과할 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치명적일 수 있는 한 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은 안전사고에 대해 좀 더 범주를 넓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안전사고의 발생을 데이터화 필요가 있는 것이다.

## 3. 사건보고서 데이터 취합

- 데이터의 취합은 사고보고서를 통해 기본적으로 취합한다. 사고보고서의 형식은 기관마다 상이하며 안전사고의 원인과 결과, 조치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개선 방안이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진다. 크게는 거주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하여 사고보고서가 다를 수 있는데, 거주시설과 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이 대상자의 특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24시간을 거주하는 거주시설이 안전사고의 빈도가 높고, 종류도 다양하다. 또, 경증보다는 중증의 질환

과 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이 생활하는 곳이 빈도가 높고 안전사고의 규모가 클 수 있다. 거주시설의 안전사고의 유형은 대상자의 자연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수나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의 과오가 있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환경적 측면으로써 바닥의 미끄러움, 험거운 핸드레일, 사각지대의 발생, 벽면과 바닥의 이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거주시설 사고보고서 >

작성일 및 작성자 정보		년 월 일 작성자 :
사고 종류		
발생 일시 및 장소		년 월 일 장 소 :
사고 발생 상황		기술 :
원 인 분 석	대상자측 원인	인하여 이용자 측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됨.
	서비스측 원인	인하여 서비스 측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됨.
	환경상의 원인	인하여 환경상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됨.
과정 및 결과		기술 :
사고 발생 시의 보고		사고 발생 분 이후 보호자 에게 연락
		사고 발생 분 이후 상급자 에게 연락
		사고 발생 시간 이후 상급자 에게 연락
향후 대책		

-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발생 후에 그 원인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지 않는다면 안전사고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인분석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또, 보고자가 자기방어를 위해 주관적 경향을 반영하여 서비스 제공자 측의 원인을 대상자나 환경상의 문제로 기술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한다. 과정 및 결과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어떻게 긴급 조치하였고, 다른 서비스 제공자의 도움을 어떻게 받았으며, 그로 인한 결과를 기술한다. 사고 발생 시의 보고는 안전사고의 발생 시간을 시작으로 하여 언제 보호자와 상급자에게 보고하였는지를 기재한다. 안전사고의 경우 보고는 생명과도 같다. 뒤늦게 보호자와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행위는 자칫 오해를 야기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와 사회복지시설에게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주지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안전사고의 발생 시, 보호자와 상급자에게 몇 분까지 보고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해 놓는다면 서비스 제공자가 안전사고의 대응에 좀 더 수월하게 임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대책은 안전사고에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핵심이다. 안전사고의 원인분석과 그에 대한 기술, 보고의 경로 등을 종합하여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유사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 보고서는 법적 책임을 규명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사회복지시설의 민형사 책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이다. 때문에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하여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발생 일시 및 장소		201 년 월 일( 요일)		장소 :	
작성일 및 작성자 정보		201 년 월 일		작성자 :                  대상자 명:	
일 반 사 고	사고원인	<input type="checkbox"/> 넘어짐 <input type="checkbox"/> 부딪힘 <input type="checkbox"/> 낙상 <input type="checkbox"/> 다툼 <input type="checkbox"/> 끼임 <input type="checkbox"/> 호흡곤란 <input type="checkbox"/> 실종 <input type="checkbox"/> 질식 <input type="checkbox"/> 질환의 위험 <input type="checkbox"/> 고열 <input type="checkbox"/> 투약 오류 <input type="checkbox"/> 식중독 <input type="checkbox"/> 음용 <input type="checkbox"/> 부적절한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사고결과	<input type="checkbox"/> 골절 <input type="checkbox"/> 구토 <input type="checkbox"/> 화상 <input type="checkbox"/> 열상(출혈동반) <input type="checkbox"/> 자상 <input type="checkbox"/> 타박상 <input type="checkbox"/> 의식불명 <input type="checkbox"/> 특이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피부발진 <input type="checkbox"/> 의식 혼미 <input type="checkbox"/> 병원 입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과정 및 결과		1차 조치 사항 : 보고 인계 사항 : 2차 조치 사항 :			
보험 처리 여부					
보호자 상담 내역					

- 이용시설의 사고보고서는 거주시설과의 차이점은 사고의 원인을 대상자 측면에서만 기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받기보다는 사회복지시설을 단순히 이용하는 차원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적 측면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의 원인이 비록 대상자의 실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안전사고는 환경적 측면과 결부되어 있다. 안전점검을 정기적, 수시로 수행하는 이유는 환경적 측면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데에 많은 부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정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은 거주시설과 같고, 보험 처리 여부는 안전사고의 규모가 경미한 사례들이 많으며, 주로 이용하는 대상자들 중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이 많아 의료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기재한다. 보호자 상담 내역도 거주시설과는 달리 안전사고의 규모가 긴급하게 보호자와 상급자에게 보고할 사례들이 많지 않으므로 보호자의 상담 내역만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고보고서들을 특정한 팀이나 담당자를 지정하여 1년이나 주기적으로 취합하여 데이터화한다. 대개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나 시설관리부서에서 취합할 경우가 많으며 중요한 것은 사고보고서의 취합과 데이터 분석, 대처 방안은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므로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이 있는 직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은 법령에 의해 연 2회 정기 안전점검과 사회복지시설의 자체 규정에 의한 수시 안전점검이나 정기 안전점검으로 구분된다. 안전점검에 따른 서식은 매우 다양하므로 사회복지시설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안전점검은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과 대상자의 특성, 안전사고의 발생이 예측되는 주요 구간이나 범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제작된다.

< 이용시설 정기 안전점검표 >

발생 유형	점검 항목 점	점검 결과 비고
넘어짐	문·문턱 등의 구조·상태(걸려 넘어질 위험 제거)	
	바닥의 미끄러움 방지 조치(기름기·물기 등 제거)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 시공 등 안전한 상태 유지	
	신발이 미끄럽지 않으며, 올바르게 착용하였는지 여부	
추락	계단이나 높은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상태	
	이동식 사다리작업 시 넘어짐 방지를 위해 붙잡아 주기	
	높은 곳에서 무리하게 뛰어내리지 않기	
	형광등 등 조명 램프 교체 시 고정 작업대 사용	
화재 피난	개인 투척용 소화기 등의 위치 및 관리 상태	
	피난 유도등 램프의 정상 점등 여부	
	비상계단, 완강기 등 탈출 시설·설비의 상태	
	조작반, 경보시설 등이 항시 사용 가능한지의 여부	
기타	누전차단기 설치, 월 1회 이상 이상 유무 점검 상태	
	전선의 피복 손상, 콘센트 파손 여부	
	가스검지기·경보기 설치, 주기적인 가스누출 점검	
	모터·주방기기의 V-벨트 덮개 설치 상태	
	중량물 취급·반복적 작업에 대한 유해 요인 조사, 작업시 설 개선 여부 등	
관리 사항	주기적인 안전 교육 실시 및 교육일지 작성	
	매년 전 종사자 건강진단 수검 및 사후관리 실시	
	개인 보호구 지급(허리·손목보호대, 안전화, 안전모 등)	

## ② 안전점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하여 연 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외 혹한기, 혹서기, 장마, 감염병 등 주기 및 절기에 따라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은 주로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거나 보고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안전점검에 관련된 사항이다. 그러므로 위험 관리를 위한 좀 더 민감한 안전점검은 자체 서식의 개발을 요한다. 즉, 상기의 안전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안전사고가 집중으로 발생하고 있는 장소와 시간대로 별도 안전점검을 할 때 비로소 실제적인 위험 관리를 위한 안전점검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안전점검은 외부의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 자발적으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자체적인 점검 주기를 설정하고 그에 대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은 2인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인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나머지 1인은 실제로 관리하는 직원이 동행하여 면밀하게 체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안전점검은 시군구에 보고하고 자체적으로 시행한 안전점검은 데이터화하여 활용한다.

## 2. 매뉴얼 작성 및 제도와 자원의 목록화

- 매뉴얼은 운영에 필요한 방침, 계획, 작업 등의 실재를 명문화하여 직원들에게 알림으로써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종의 사무 업무이다. 매뉴얼은 직무 매뉴얼과 고객 응대 매뉴얼로 흔히 쓰이고 있으며 위기 시의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다. 위기 대응 매뉴얼에는 소방과 안전에 대한 매뉴얼, 감염 관리 매뉴얼이 있을 수 있는데, 위기와 관련하여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것은 위기의 대응만큼 효율과 효과가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거나 선언되어 있지 않다면 대응과 대피의 방법도 상이할 것이고, 상이하다면 효율과 효과는 그만큼 반감되기 때문이다.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소방과 안전에 관한 매뉴얼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안전공단에서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이 매우 효용가치가 높다. 하지만 매뉴얼 작성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매뉴얼이 가지고 있는 실제성이다. 발간된 매뉴얼 자료들은 전체 사회복지시설에서 통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실제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활용하고자 한다면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한다. 매뉴얼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과 대상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피난, 소방기구와 설비, 경로 등의 정보가 완전하여야 작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세세한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위기 시에 직원과 대상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긴급지원과 관련된 제도는 크게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될 수 있다.
- 공공의 긴급지원제도는 2006년 3월부터 긴급생계비 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는데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있는 대상자에 1개월 간의 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차츰 발전하여 생계비뿐만 아니라 의료비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로 확대되었다가 빈곤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현재에는 위기 상황 주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어 더욱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민간의 긴급지원제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현금과 함께 현물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민간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현대사회에서의 위기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러한 위기가 개인에게 닥쳐왔을 때, 개인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있는 한계가 커지고있기 때문이다. 안전에 관련된 위험 예방하기의 학습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학습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 ① 소방안전 매뉴얼의 작성법

소방과 안전의 매뉴얼은 다음의 다섯 가지의 작성법에 의해 유의하여 작성한다.

#### 1. 간단명료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특성상, 너무 난해한 매뉴얼은 매뉴얼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시각화하여 제시하고 가급적 이론보다는 행동 위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대상자뿐만 아니라 직원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할 때에도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2. 사회복지시설의 현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발간된 자료를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매뉴얼이라고 하여 자료집에 보관만 해서는 매뉴얼이라고 할 수 없다. 기관의 현실에 맞게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한다. 자위소방대 조직, 비상연락망 체계, 화재 시 대응체계, 피난안내도 등은 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여 작성함으로써 전달받은 직원과 대상자들이 오해가 없이 자신의 맡은 위기대응 업무나 대피 상황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회복지시설의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위기에 관련된 인식 상황이 다르고 대피 방법도 상이하다. 그러므로 매뉴얼은 현재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4. 예방과 대피를 중심으로 한다.

다른 여타의 기술보다는 안전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며, 만약의 상황이 발생할 시에 어떻게 대피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인가가 중요한 핵심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기의 네 가지를 고려하여 매뉴얼을 작성할 때 필요한 역량은 시나리오의 작성 능력이다. 시나리오 작성 능력은 위기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과 대상자의 특성,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기관 현황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직원만이 해낼 수 있는 매우 난이도가 높은 역량이라 할 수 있다.

5. 정확하게 전달한다.

아주 좋은 매뉴얼이라 해도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보여주기식의 매뉴얼, 점검받기용의 매뉴얼은 그 가치를 다하지 못한다. 정해진 시기에 모든 직원과 대상자들이 참여하여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에서 권장되고 지지받아야 할 주요 업무이다.

## ②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 상황에서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며, 민간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기업의 사회공헌에 의한다. 그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대상

-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2)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3)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4)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5) 이혼으로 인한 소득 상실
- (6) 단전 1개월 경과 시
- (7) 주 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또는 간이과세자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

- 4,800만원이하) 1년 이상 영업 지속
- (8)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유지 곤란-3개월 이상 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을 못하거나 실업급여 수령 후에도 실직이 장기화될 경우
- (9)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연계) 생계 곤란
- (10)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위기에 처한 경우
- (11) 위 사항에 해당되며 지원자의 소득은 최저생계비 185%(4인 기준 3,806천원) 이하인자,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의 기준을 만족해야 공공의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지원할 수 있다.

## 2. 지원 종류별 지원 내용과 금액

생계비 지원으로 시작된 공공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복지법에 의한 한시적 제도였으나 빈곤격차와 사회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이 제기되어 현행의 긴급복지지원제도로 발전하였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가 발생한 그 시점에서 대상자 스스로가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이후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최대 횟수
위 기 상 황 주 급 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110만원 (4인 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 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 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 사용 비용 지원	60만원 (대도시, 4인 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 시설 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137만원 (4인 기준)	6회
부 가 급 여	교육	초 중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학비 지원	초 20.9만원 중 3.3만원 고 40.8만원 및 수업료 입학금	2회
	그 밖 의 지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90.800 / 월		1회 (연료비 6회)



	원	-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각1회	
민간기관·단체 연계 지원 등	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3. 긴급 지원의 경로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하며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선지원을 한다. 선지원 이후에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후 조사가 이루어지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검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지원을 받기 위한 사유가 적정하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지속하여 지원되며 부적정이 판정되면 환수나 지원 중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 4. 민간자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매면 배분 사업의 일환으로 긴급지원사업을 진행도하고 있으며 이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 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되는 사업이다. 중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각 지회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민간의 기업 사회공헌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하게 민간자원이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사회복지관, 노인과 장애인복지관에서 민간자원의 일환으로 긴급복지와 관련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